

與 “한중 정상화” vs 野 “외교참사”



여야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무너졌던 한중관계를 정상화시켰다”며 호평한 반면 야당은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난 정부에서 무너졌던 한중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

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해 참가 의사를 밝힌 점과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도 논의하기로 한 점 등 전체적으로 한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

문재인 대통령 방중 관련 상반된 평가 나와
“평창올림픽 검토·FTA협상 재개 등 성과”
“외교안보 좌충우돌...참모진 인적쇄신해야”

인은 “외교 참사를 넘어 국치(國恥)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고 혹평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정유국채(丁酉國債)로 기록 될 이번 대중 골육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을 재수립하고 인사를 전면 개편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면서 3불(不) 정책 모두를 내어주고 얻은 것이라고는 ‘발자리 패싱’, ‘공동성명 패싱’, ‘경제사절단 패싱’ 등 3대 패싱과 ‘공합 영접 골육’, ‘하나하나 4대원칙 골육’, ‘기지단 폭행 골육’ 등 3대 골육을 골고루 당하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이다. 즉 시 외교 안보리인 참모진 전체를 인

적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민 방문 격에 맞지 않는 일정이었다”며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을 먹고 언론인이 폭행을 당한 일은 국민 방문 격에 맞지 않았다”며 “정상회담도 사실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외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귀국하면 외교부 장관과 주중대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무리한 국민 방문을 추진해서 사실 국민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줬으니 경질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본격 개헌드라이브 ‘국회 200석 문턱’ 어떻게 넘길까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개헌 가결을 위한 국회 내 정족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주목된다.

일단 국민의당과는 원내대표 간 합의로 개헌 추진을 약속한데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은 개헌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여기에 세 야당이 모두 정당투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하는 형태의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만큼 개헌·선거구제를 두고 ‘4당 연대’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121석), 국민

한 천민인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지방분권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호응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개헌안은 기명 투표인 만큼 의원들이 지역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어려울 경우 청와대가 나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미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바른정의당과는 개헌연대 가시화 한국당 향해 여론 압박...靑발의 카드

의당(39석), 바른정당(11석), 정의당(6석)을 합쳐도 의석수가 부족하다. 결국 자유한국당(116석)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으로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이 반감지민은 않은 상태다. ‘문재인 정부 중간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는 데다 개헌을 지지할 선거와 동시에 추진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등과 함께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호응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 반대가 한국당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달라”며 공세에 나섰다. 당 내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내년 6·13 지방분권 개헌을 위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 발의할 경우 한국당이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칫 개헌은 한국당의 주장을 담지 못한 ‘청와대 안’으로 이뤄지고, 지방선거는 ‘개헌 대반(反) 개헌’의 구도로 치러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추진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난 12일에 열렸던 헌법전문 기본권 관련 의원총회에서 자리를 지킨 의원은 소속 의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명 수준이었다.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을 주제로 열린 의총에도 50여명이 참석하는 등 저조한 출석률을 기록했다.

당대표가 계속 해외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개헌을 힘 있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뉴스스

한국당 ‘친박 쳐내기’...서청원·유기준 등 62인 당협위원장 탈락

오늘부터 3일간 탈락자 대상 재심 청구 받아

자유한국당은 17일 서청원(경기 화성시갑)·유기준(부산 서구동구)·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염용수(경남 밀양시)·김영환(충청남도 당진시)·김희정(전 여수시)·장관 등이 탈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로 친박 전현직 의원들이 타 것이었다는 평가다.

홍준표 한국당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현역의원 4명과 원외위원 58명을 포함해 62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앞서 지난 10월 2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당 최고위에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보고했으며 당 최고위는 당무감사위의 권고를 받아 1권역(영남·강남3구, 분당)은 55점, 2권역(호남 제외 전 지역)은 50점을 컷트라인(탈락 기준선)으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권고 교체대상자는 면했지만 현역의원의 경우엔 60점에 미달하는 사람이 16명”이라며 “뒤가 부족하지 개별 통보해서 개선의 여지를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분과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원내활동, 당 활동, 당원 확보나 주어진 미션이 있다”며 “달성 정도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129명 중 대상 중 58명이 기준에 미달해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서울 영등포를 당협위원장이지만 이번 당무감사에서 기준점수에 못 미쳤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부 장관을 지낸 부산 연제구 당협위원장이던 김희정 전 의원도 당무감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해훈 바른정당 의원이 탈락하자 서울 서초갑 지역구를 맡았지만 이번 당무감사에서 1권역 기준점수인 55점을 넘지 못했다.

친박계 비례대표로 19대 의원을 역임한 전하진 전 의원도 경기 성남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서 홍준표(왼쪽)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당구를 당협위원장이자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을 역임한 박창식 전 의원도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됐다.

친박이 아닌 인사 중에는 친 김무성계로 불리는 박민식 전 의원이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강서구갑 당협위원장을 계속 맡았지만 이번 당무감사에서 탈락했다.

당무감사위는 18일부터 3일간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후임 당협위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